사망 6개월…묻힐 곳 없는 전두환

유골함에 담겨 연희동 자택에
내란죄로 국립묘지 안장 불가
회고록에 "전방 고지 묻히고 싶다"
군과 협의도 없고 장지 못 구해
일각선 "묘지 훼손 우려도 작용"

지난해 11월 숨진 전두환씨의 유해(遺骸)가 서울 연희동 전씨의 자택에 여전히 안치돼 있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5·18 유혈 진압의 장본인으로 지목받는 전두환씨는 생전 펴낸 회고록에서 "전방 고지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사망한 지 169일이 지난 현재까지 그의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집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두환씨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날 광주일보에 "대통령님의 장지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 장례 이후 줄곧 유골함에 모셔져 연희동 자택에 안치돼 있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장지와 관련한 전씨의 생전 바람이 담긴 '전두환 회고록' 내용을 언급하면서 "전 대통령님 장지와 관련해 그동안 군 당국은 물론 정부와 협의가 일절 없었다"며 "유족도 그렇고 저희도 대체 장지 마련 등 유해 매장을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두환씨 측근으로 분류되는 4성 장군 출신의 한 인사도 "전 대통령 유해는 줄곧 연희동에 계신다. 납골당이나 수도권에 별도의 장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전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전두환씨 사망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전두환씨가 생전에)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 전 비서관은 전두환 회고록 3편 후반부에 수록된 '글을 마치며'라는 대목을 가리켜 사실상의 문서로 된 유서라고 소개했다.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 날을 맞고 싶다"라고 기술된 부분이다.

장례를 마친지 6개월이 다 되도록 '전방 고지'에 묻히지 못한 전두환씨의 유해는 현충원 등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가보훈처는 전씨 사망 당일 "내란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전씨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의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됐다.

일각에서는 전두환씨 유족이 고인의 유해를 자택에 줄곧 보관 중인 것을 두고 "유해 훼손 등 불상사를 염려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사망한 노태우씨의 경우 파주 통일동산 동화경모공원에 유해가 안치된 것과 비교하면서다.

군 출신 인사로 5공(共)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김충립(7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은 "노태우와 달리 전두환은 자신은 물론 유족들이 '광주에 제대로 된 사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광주지역의 정서다. 또 둘 다 대통령을 지냈지만 광주 무력진압 책임 등 모든 면에서 둘을 동일 체급으로 보는 이는 없지 않은가"라며 "유족 처지에선 유해 훼손 등을 걱정할만 하다"고 했다.

김 전문위원은 자신이 수년 전부터 직간접적으로 전두환·이순자씨에게 광주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던 사실을 강조하며 "고인을 위해서도, 유족을 위해서라도 전두환씨 유족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 광주(시민들)에 사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0일 오전 5·18민중항쟁기념 대전행사위원회는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충남기계공고에 설치된 '학살자 전두환 방문 기념비'(오른쪽)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18기념재단 제공〉

서부경찰, 6개월 추적 끝 보이스피싱 수금책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 서·남구, 광양, 보성, 전북 남원 등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에게서 현금 7300만원을 받아 총책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1월 19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건네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6개월에 걸친 경찰의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약물 과다 투약 20대 돌연사 관련 클럽 동행자 마약 투약 추가 확인

약물(마약)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부검의 소견을 받은 20대 남성 돌연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남성이 숨지기 전날 도심 클럽에 동행했던 남성 1명의 마약 투약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광주동부경찰은 "돌연사한 20대 남성 A씨와 함께 도심 클럽에 갔던 20대 남성 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5일 오후 숨진 A씨가 숨지기 전날인 지난 4일 밤 상무지구 클럽에 동행했던 남성 4명 가운데 3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소변 검사 등 간이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남은 1명에 대해서도 약물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입건된 남성들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각각 1~3회에 걸쳐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시 오월…전두환 흔적 지우기 목소리 커진다

충남기계공고 기념비 철거 촉구
고향 합천선 "일해공원 명칭 변경"

명칭 논란에 휩싸였던 경남 합천 '일해공원'을 비롯해 전두환씨 집권기간 전국 곳곳에 설치된 전두환 미화 기념물 등 '전두환 흔적 지우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민중항쟁기념 대전행사위원회는 10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기계공고에 설치된 '학살자 전두환 방문 기념비'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5·18대전행사위는 "올해 시민 제보를 받아 충남기계공고에 1981년 전두환 방문을 기록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전두환이라는 반인도적 범죄자가 남긴 오욕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두환을 찬양하는 모든 기념물의 철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전에서는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2020년 5월 국립대전현충원에 걸린 전두환 친필 현판을 교체한 바 있다"며 "이웃한 충북교육청의 경우, 2020년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도내 교육시설 전수조사를 거쳐 공립학교 7곳에 있던 '이 건물은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하사금으로 건립됐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준공 표지판을 모두 철거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전두환씨를 가리켜 '학살과 독재를 저질렀는데도 국민 앞에 단 한마디 사죄도 없이 죽은 인물'이라고 비판한 뒤, 대전시교육청 측에 ▲관내 학교 전두환·노태우 미화 기념물 전수조사 및 철거 계획 ▲충남기계공고 기념비 철거 계획을 담은 답변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전두환씨 고향인 경남 합천에서도 '일해공원(日海公園)' 명칭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합천 시민단체인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5·18민주화운동 42주기 당일인 18일 오후 일해공원 앞에서 '5·18기념식 및 일해공원 명칭 변경 촉구 합천군민대회'를 연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관계자는 "5·18기념식을 거행한 뒤 공원 표지석에 '철거 스티커'를 붙이고 '일해는 합천의 미래가 아니다'고 적힌 표지석 덮개를 설치하는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다"며 "합천군수 후보자들에게도 일해공원 명칭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해공원은 지난 2004년 합천읍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뒤 2007년 전두환의 별호인 '일해'를 따서 '일해공원'이라는 명칭으로 확정됐다. 경남시민단체, 5·18유공자단체 등이 독재자 전두환을 미화한다며 줄곧 공원 명칭 변경을 요구했으나 합천군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여천NCC 여수공장 위법사항 1117건 적발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내 광주·전남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된 여천NCC㈜ 여수공장에서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29일 여천NCC 여수공장 내 4개 공장에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117건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결과 공장에서는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방폭성능 유지 미흡 등 안전 조치 위반 사항만 284건이 발견됐다. 안전밸브 적정성 점검을 하지 않거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정안전관리를 위반한 사례도 387건을 기록했다.

또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는 등 보건조치 위반 사항 43건, 안전보건교육이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일반관리체제 위반 사항 403건도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중 619건을 형사고발하는 등 사법 조치하고 461건에 대한 과태료 약 96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37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내용을 감안했을 때, 여천NCC(주)는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인력충원, 협력업체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천NCC 여수공장에서는 지난 2월 11일 열교환기 청소작업 후 기밀시험 중 설비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4명과 부상자 4명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촉발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